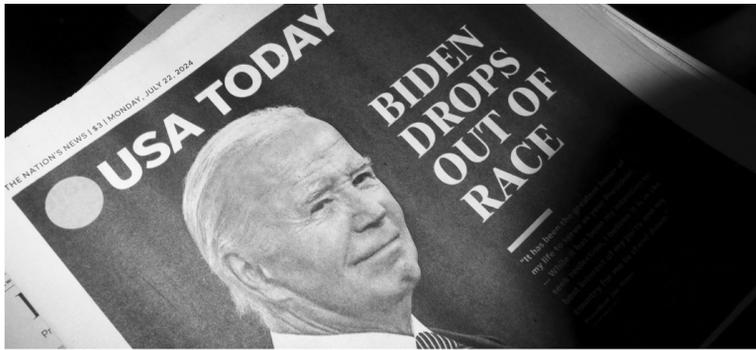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 '나이의 벽' 넘지 못했다

변호사 활동 1970년 정치 입문
29세에 연방 상원의원 당선
오바마 정부서 8년간 부통령
81세 재선 도전 중 후보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22일자 USA 투데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치가로서의 오랜 삶 속에서 좌절과 재기를 반복해온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결국 '나이의 벽'을 넘지 못했다.

29세의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반세기 넘게 워싱턴 정치의 한복판에서 미국 현대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 끝에 스스로 재선 고대에서 물러났다.

'관록의 정치인'인 바이든은 정치 '이단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영업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본인 스스로 낙담하지 않은 집안 환경에서 시작(Humble Beginnings)했다고 표현하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델라웨어대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후 시라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해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1972년(29세)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미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것이자 국가 설립 초기를 제외하면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연소 기록이었다. 이후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돼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취임 당시 78세로 이미 미 역사상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다.

백인 중에서 소수인 아일랜드계로 가톨릭 신자다. 역대 대통령 중 가톨릭 신자는 역시 아일랜드계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개인사는 갖은 굴곡으로 점철돼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당선 한 달만인 1972년 12월 교통사고로 아내와 13개월 된 딸을 잃은 바 있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차남 헨터는 불과 3세의 나이에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영어 교사였던 현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는 1977년 재혼해 딸을 얻었다.

장남 보 바이든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남을 두고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될 인물'이라며 꿈꿔야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는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남 헨터는 유년 시절 겪은 충격 탓인지 젊은 시절부터 술에 빠져 살았고 마약에도 손을 댔다. 헨터가 받아온 우크라이나 기업 유착 의혹, 탈세 의혹, 불법 총기 소유 유죄 인정 등은 정치적으로도 두고 두고 아버지에게 짐이 됐다.

바이든은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것만 전망을 뒤엎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수성에 성공하는 등 선전하자 그 기세를 업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언 이후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됐지만, 민주당 내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의 대선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무난히 재선 도전으로 향하는 듯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는가 하면, 말실수가 잦아지면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 맞대결에서 처참하게 무너지자 지지자들의 우려가 한꺼번에 폭발했고, 당안팎의 여론이 급격하게 '사퇴 불가피론'으로 몰렸다.

결국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24일 만인 이날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체 후보 해리스 부통령 '주목'

민주당 대체 후보 선출 어떻게
대의원 4600명이 최종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함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대체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제이미 해리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의장은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만 밝혀 아직은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미 6월까지 끝난 주(州)별 경선을 다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460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대선에 나설 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따라서 4600여 명의 전당대회 대의원 중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 확보한 99%는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전당대회(8월19~22일-시카고) 또는 그 전 온라인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하차함에 따라 바이든을 짝기로 약속돼 있던 대의원은 '자유'의 몫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지만 '바이든의 대의원'들이 의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는 대의원들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투표일정과 방법을 민주당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규칙위원회는 당초 22일(월) 시작하는 주에 회의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 날짜를 8월1~5일 사이로 정하려 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재선 포기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지, 아니면 8월19~22일 전당대회(시카고)에서 현장 투표로 진행될지 미지수가 됐다.

당내에서 '열린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 확정 시기를 8월19~22일 전당대회때까지로 미루자는 의견이 분출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보통은 경선 승리자에 대한 대의원들의 형식적 추진 절차인 전당대회가 실질적인 경쟁 무대가 된다.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면 8월7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반 득표자 새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사퇴 발표 1분 전 참모들에 알렸다

바이든, 이들 간 비밀리에 진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결정은 발표 하루 전 가족과 최측근하고만 공유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오후 늦게 스티브 리셰티 대통령 고문에게 전화해 "마이크와 함께 집으로 와라"고 비상 호출했다.

리셰티 고문과 마이크 도널론 수석 전략가는 바이든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이에 두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으며, 셋은 밤늦게까지 대선 후보 사퇴 입장문을 작성해 이날 완성했다.

도널론이 대통령의 입장문 작성을 돕는 동안 리셰티는 언제 어떻게 참모들에게 공지할지,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등 다음 조치에 집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의 중도 하차 결정은 지난 48시간 이내에 이뤄졌다고 한 고위 캠페인 참모를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격리 중 전화로 가족과 고위 참모들과 상의를 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CNN에 중도하차 계획은 토요일밤에 시작해 일요일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인 이날 오후 1시46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려 전세계에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하기 불과 1분 전에야 사퇴 결정을 자신의 다른 참모들에게 알렸다.

이런 대반전이 벌어지는 주말 내내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에야 대통령의 결정을 알게 됐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사퇴 발표 전에 몇 차례 통화했다고 CNN에 전했다. /연합뉴스

조선인 강제노역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냐... 보류냐

위원회 개막...한일 막판 외교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할 제 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사도 광산을 포함한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 심사는 26~29일 진행된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달 6일 공개된 사도 광산 평가 결과에서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여러 지적 사항을 붙여 '보류'(Refer)를 권고했다.

자문기구는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 평가 결과가 알려진 이후에도 사도 이후 유산이 많이 남은 구역 제외, 일부 유산의 완충지역 확장, 상업 채굴 재개 금지 등 이코모스 일부 권고를 수용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 광산 유산 시기를 에도 시대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외면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거듭해서 촉구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위령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 반발 등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 일부 시민단체도 니가타현 지역 역사서 등에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이 기술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와 마주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심사 당일까지 '전체 역사 반영'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에도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기간의 광산 역사를 전사·설명하라는 권고에 역사 전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유산위원회도 보류를 결의하면 세계유산 등재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올해) 만장일치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은 한국과 (의견) 절충, 각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스포츠경영지도학과

뷰티디자인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의약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글로벌실버케어학과

글로벌조선학과

글로벌화학기공학과

국제학과